

2014 희망만들기!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여행!!
『전남 중부권 미래발전 전략』
정책토론회

일시 : 2014. 2. 26.(수) 14:00~16:00

장소 :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지하2층 만연홀)

주최 :  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

 민주당 전남도당



목 차



인사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 이 윤 석 국회의원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 / 황 주 흥 국회의원

식 순

기조 발제

전남 중부권 미래발전 전략1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종 일

참고자료

민주당, 2013년도 12월 임시국회 성과보고25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 일정67

| 인사말 |



민주당전남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이 윤 석

2014년 갑오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민주당 전남
도당 당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
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013년 6월 광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그동안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전남도민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남도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고 전남도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보살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앞으로 있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동부권과 서남권 정책토론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오늘 중부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남의 발전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013년을 반성과 각성하는 마음자세로 한해를 보내면서 나름 하루빨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고, 2014년에도 청마의 해를 맞아 쉬지 않고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 우선 지난 1월 15일 전남·경북 국회동서화합포럼에서 민주당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하의도故김대중대통령 생가 방문을 통해 동서화합의 취지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고, 3월 3일에는 민주당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인 경북 구미故박정희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전남도당이 보다 나은 전남의 발전과 나아가 동서화합을 위해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위대한 전남도민과 민주당 당원 동지들의 관심과 애정입니다.

또한, 민주당 전남도당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불통이 아닌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되겠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전남도민 여러분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민생과 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토론회 개최하기까지 수고를 다해주신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하신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전남발전연구원), 이재의 원장(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나노바이오연구원), 정영팔 부장(광주mbc 보도국), 박창규 교수(전남도립대학교), 김병완 교수(광주대학교), 김재철 선임연구위원(광주발전연구원)을 비롯한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미래전남 중부권 발전에 통찰력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더 나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



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
국회의원
황 주 홍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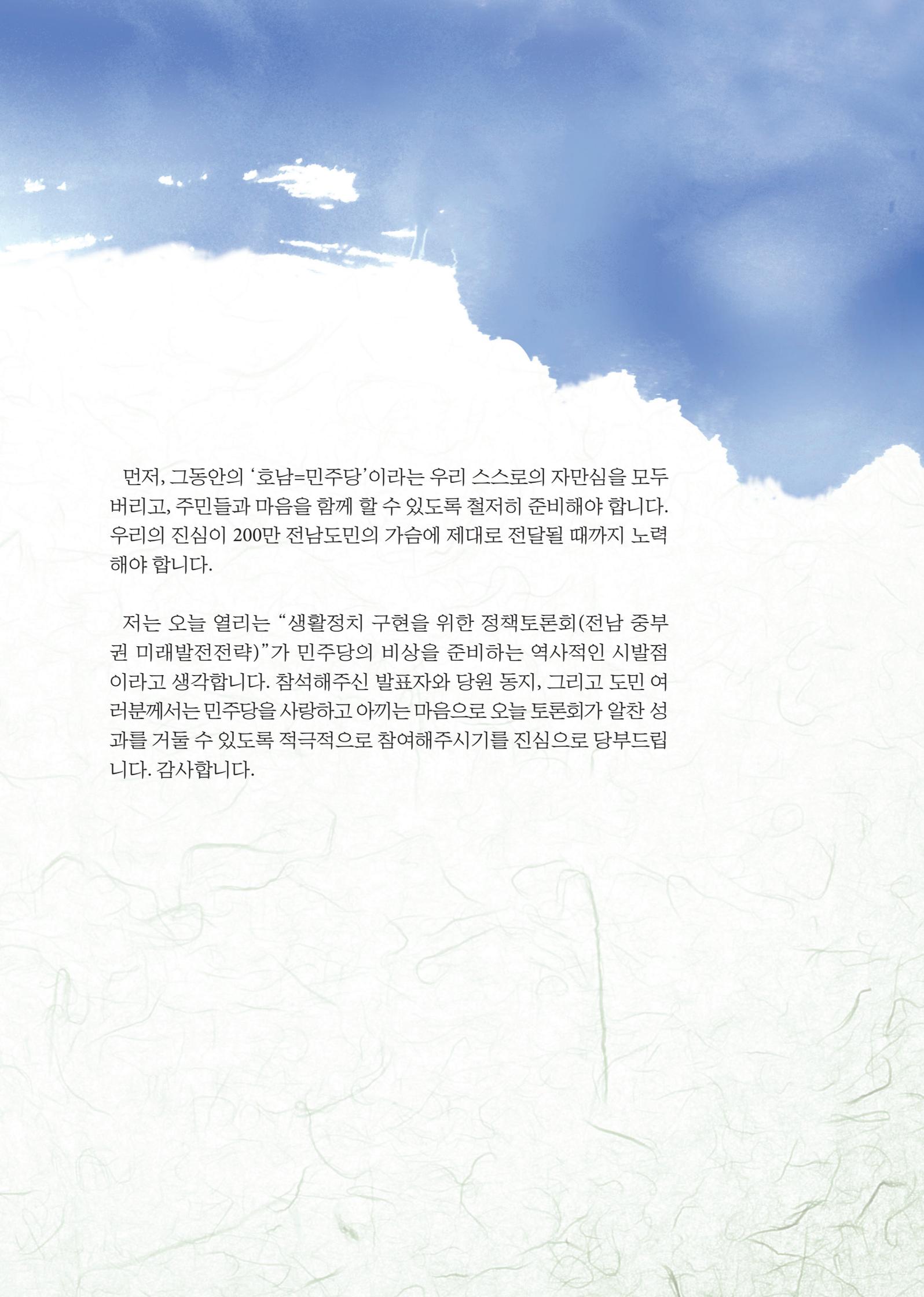
희망찬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우리 전남이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전통적인 지지층뿐만 아니라 호남으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던 호남민심이 우리 당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적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더욱 냉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6·4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만 할 막중한 공동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약무전남 시무민주’라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6·4지방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남에서부터 민주당이 힘차게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호남=민주당’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자만심을 모두 버리고, 주민들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200만 전남도민의 가슴에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열리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전남 중부권 미래발전전략)”가 민주당의 비상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발표자와 당원 동지,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토론회 식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사회자
14:10 ~ 14:30 (20')	<p>【인사말】</p> <p>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국회의원/원내부대표)</p> <p>황주홍 (전남도당 지방선거기획단장/국회의원)</p> <p>내 빈 (지역위원회 위원장)</p>	<p>인사말씀</p> <p>토론자 소개</p>
14:30 ~ 14:50 (20')	<p>【기조발제】</p> <p>▶ 주제 : 전남 중부권 미래발전 전략</p>	<p>전남발전연구원</p> <p>김종일 선임연구위원</p>
	<p>【좌 장】 이건철 원장</p>	전남발전연구원
	<p>【토론자】</p>	
14:50 ~	1. 이재의 원장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나노바이오연구원
15:40 (50')	2. 정영팔 부장	광주 mbc 보도국
	3. 박창규 교수	전남도립대학교
	4. 김병완 교수	광주대학교
	5. 김재철 선임연구위원	광주발전연구원
15:40 ~ 15:55 (15')	<p>【질의응답】</p>	청 중
15:55 ~ 16: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인사말 및 폐회선언 	좌장 및 사회자

기조발표



전남 중부권 미래발전 전략

김 종 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남 중부권 미래발전 전략

2014. 2. 26

전남발전연구원 김 종 일

JRI 전남발전연구원
JEONNAM RESEARCH INSTITUTE



목 차

- I. 전남 중부권의 현황 및 발전 잠재력
- II. 전남 중부권의 비전 및 미래발전 방향
- III. 전남 중부권 미래발전 프로젝트
- IV.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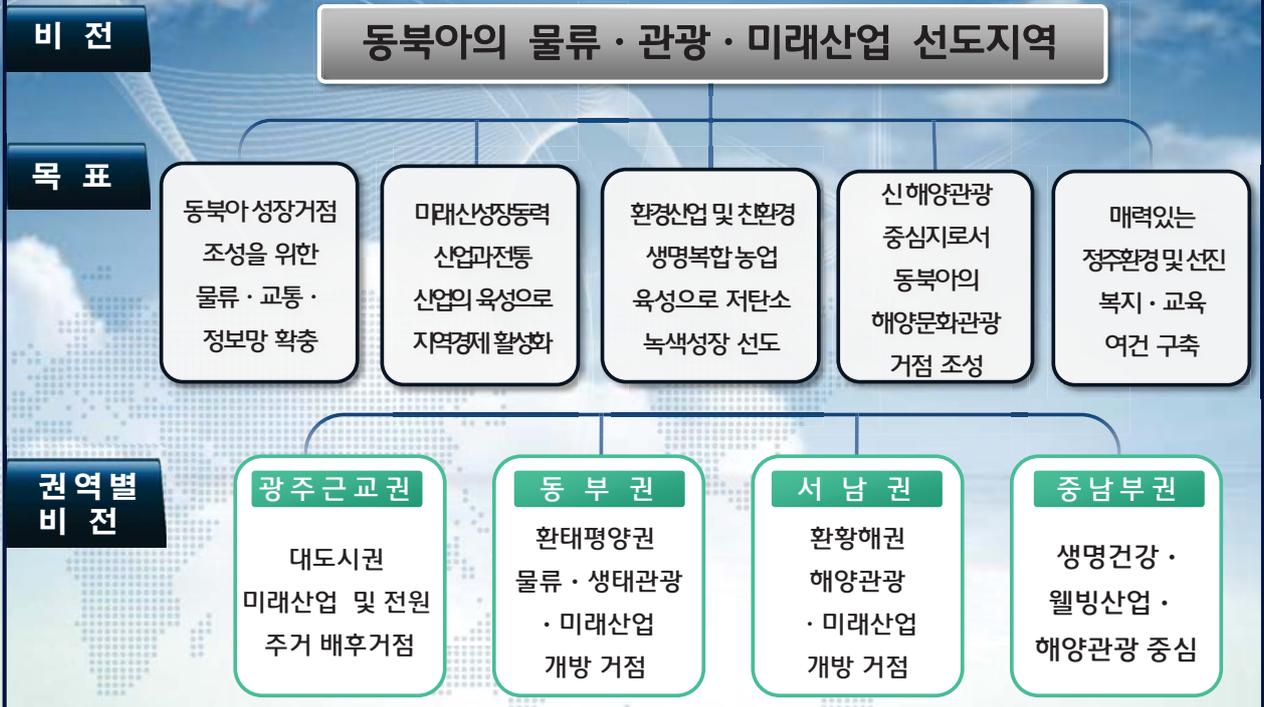


I. 전남 중부권의 현황 및 발전 잠재력

I. 전남 중부권의 현황 및 발전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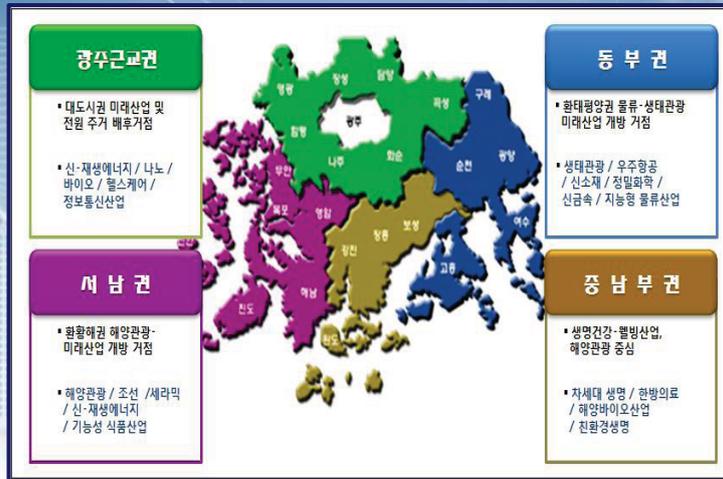
1 전남발전 비전 및 권역 구분

전남발전 비전 및 목표



전남발전의 권역구분

- 생활권, 경제활동,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4대 권역구분(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12)
- 권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개발과 함께 권역간 균형개발 추진



▲ 전남발전 권역구분, 비전 및 특화방향

- 대선공약화를 위한 전남 권역별 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전남발전연구원, '12)
- 지방선거에 대비한 시·군 발전전략 수립(전남발전연구원, '14)
- 본 발표는 주최측 요청에 따라 '광주근교권'을 '중부권'으로 변경

권역별 현황 비교(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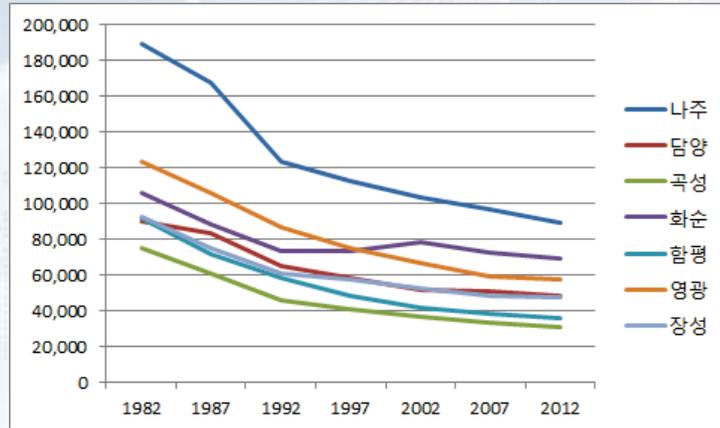
구분	중부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
면적(km ²)	3,783.8(30.8%)	3,092.7(25.2%)	3,210.9(26.2%)	2,182.5(17.8%)
인구(명)	380,061(19.7%)	822,324(42.5%)	545,369(28.2%)	185,466(9.6%)
고령화율(%)	25.9	19.4	22.7	28.6
재정자립도(%)	14.6	21.7	14.9	10.1
의료기관(개)	386	739	516	159
의료인력(명)	4,782	7,183	5,508	1,055
기초생활보호자(명)	22,556	28,313	26,138	10,663
지역내총생산(GRDP, 백만원)	9,068,116(14.6%)	39,358,251(63.2%)	11,080,937(17.8%)	2,814,305(4.5%)
총취업자수(천명)	748	1,447.4	1,024.6	367.1
농림어업	364.1	262.6	350.7	187.4
광업 및 제조업	62.6	177.2	128.2	18.6
서비스업	321.5	1,008.1	545.5	161
경제활동참가율(%)	64.9	62.6	66.7	64.5
고용율(%)	64.5	62.0	66.2	64.2
실업율(%)	0.7	0.9	0.8	0.4

주 : GRDP는 2011년 자료
자료 : 국가통계포털, 전라남도 통계연보(2013)

2 전남 중부권의 과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 7개 시·군 인구 380,061명, 전남의 19.7% 점유
- 고령화율 : 권역 평균 25.9%, 화순 21.2%, 곡성 30.6%
- 지역 인구의 주요 전출지역('12) : 광주, 전남, 경기, 서울 순



▲ 전남 중부권의 인구변화 추이



▲ 전남 인구의 주요 전·출입지

취약한 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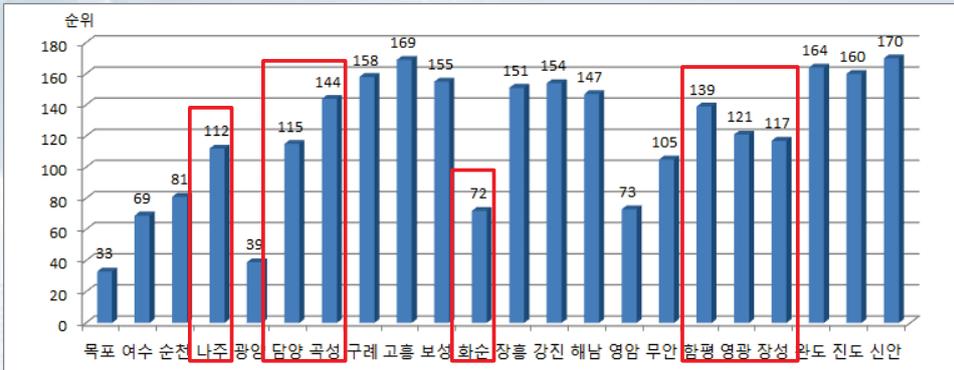
- 사업체수 24,821개소(전남의 18.2%), 종사자수 115,630명(전남의 19.2%)
 - 종업원수 5인미만 사업체 전체의 81.4% 점유, 종업원수 300인 이상 사업체 19개소
-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전체의 48.7% 점유
- 제조업 기반 취약 : 제조업체수 397개소, 제조업체 종사자수 15,433명(전남의 28.2%, 6.5% 점유)
- 7개 시·군 지역내총생산(GRDP) 9조 681억원(전남 전체의 14.6%)
 - 나주 2조 2,920, 영광 2조 470, 장성 1조 2,635, 화순 1조 1,660, 담양 8,760, 곡성 7,763, 함평 6,473
-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2011년) ※ 전국 평균 51.9%, 전남 평균 20.7%
 - 화순 21.6%, 담양 16.4%, 나주 15.0%, 장성 10.7%, 영광 10.4%, 곡성 9.4%, 함평 8.1%
- 나주미래산단, 곡성산단, 담양산단, 빛그린산단, 영광산단 등 산단 조성 및 활성화 시급

지역발전 및 낙후도 비교

- 지역발전지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발전지수 산출
 - 지역발전 종합지수 상위 50위권 : 화순 38위
 - 영역별 상위 50위권 : 생활서비스지수 화순 4위, 삶의 여유공간 나주 37위, 곡성 43위

지역발전 및 낙후도 비교

- 지역낙후도(KDI, 2012)
 - 인구(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경제(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기반시설(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률) 등 분야별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낙후도 지수 산출



▲전남 시·군별 지역낙후도 순위 (KDI, 2012)

지역간 연계·순환교통망 확충 시급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방사상 교통망 확충
- 지역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 핵심사업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순환교통망 확충 시급
 - 광주 제3순환도로, 광주도시철도 나주·화순 연장 등

3 여건 변화

동북아경제권의 부상

- 한·중·일 동북아경제권의 부상에 대응 연안지향적 국토축 형성
 - 동북아 3국이 세계 GDP의 19.6%, 수출액의 18.5%, 수입액의 16.3% 점유(2010)
 - 중국의 경제력(2013) : GDP 8.9조\$(세계 2위), 총무역액 4조 1,600억\$(세계 1위)
- 서해안에 대중국 교류 및 신산업벨트, 남해안에 경제·물류·휴양허브 구축

대중국 교류거점 확보,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서해안 산업벨트 구축 등 필요

첨단 융·복합산업 발달

- IT, BT, NT, ET, CT 등 과학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영역 창출
- 기술, 지식, 정보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산업 비중 증가

인적자원 관리, 연구개발 투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필요

에너지 · 기후시대 (Energy Climate Era) 도래

- 최근 100년간(1906~2006) 지구평균기온 0.74℃ 상승(IPCC, '07)
- 현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시 21C말 지구평균기온 3.7℃, 해수면 63cm상승(IPCC, 5차보고서 초안, '13)
-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연안저지대 침수, 집중호우, 슈퍼 태풍, 한파 및 폭설 등 기상재해 확대 전망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탄소시장 대응 등 새로운 기회 창출 필요

저출산 · 초고령화시대 도래

- '10년 합계 출산율 1.2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
- '12년 기대수명 81.4년('02년 대비 4.4세 증가), 100세이상 장수인구('11년) 1,836명, '05년 대비 91.1% 증가

인구감소 및 복지수요 증가, 교류인구 증대 필요

양극화 심화

- 소득, 주거, 교육 등 사회 · 경제 각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팽창되어 계층간 · 지역간 갈등 심화
-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지역이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에 취약

사회적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지원 강화

4 전남 중부권의 발전 잠재력

호남고속철도 개통(2015년)

- 서울~광주송정간 1시간 30분대 접근 가능
- 수도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 인구 · 산업 · 관광 등 각 분야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 마련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으로의 빨대효과 최소화를 위한 분야별 · 지역별 대응책 마련 필요
- 열차의 증편 운영을 통한 철도 수송분담률 증대 필요
- 철도 수송분담률 : 서울~부산 68.5%, 서울~대구 66.0%, 서울~광주 32.2%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 2015년까지 16개 공공기관 이전 (직원수 약 6,600여명)
- 현재 2개 기관 이전 완료, 13개 기관 청사건축 중(공정률 64.5%)
- 에너지, 농생명, 문화예술, 정보통신 등 연관 기업체 및 연구소 등 유치, 첨단 융 · 복합산업 육성 기반 확보
- 주거 · 교육 · 의료 · 쇼핑 등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필요
- 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연관산단 조성 필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4년, 공정률 83%)

- 도입시설 :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 광주·전남 문화관광산업 발전의 전환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의 문화관광상품 연계 전략 마련 필요
- 아시아문화의 원류(벵농사, 불교, 한자문화 등) 활용

광주광역시 및 중부권 국제행사 개최

- 주요 국제행사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 국내·외 관광객 증가, 관련 기반시설 확충, 국제적 이미지 제고
- 광주광역시 및 인근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 부상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 풍부
- 서해안을 중심으로 5GW 풍력프로젝트 추진
- 혁신도시와 서남해안을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필요
- 한전 중심 smart grid, smart water grid, 해상풍력 등

생물·의약산업 육성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중심기반 구축

- 식품산업연구원(나주), 생물의약연구원(화순), 나노바이오연구원(장성), 생물방제연구원(곡성) 등 생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 화순전남대병원, 생물의약산업단지, 백신산업특구 등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 건강 기능성식품, 생물의약산업, 화순전남대병원, 산림휴양자원 등을 연계한 바이오 헬스케어 허브 조성 필요

풍부한 관광·레저·산림휴양자원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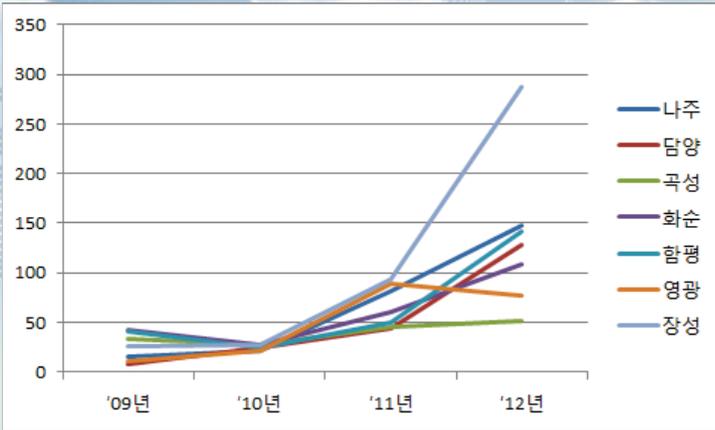
- 국·도립공원 : 내장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 지정관광지 : 나주호, 담양호, 도림사, 도곡온천, 운주사, 사포, 불갑사, 장성호, 홍길동테마파크
- 온천·리조트 : 화순온천, 도곡온천, 골드스파리조트, 담양리조트, 영광해수온천랜드 등
- 산림휴양시설 : 금성산, 홍길동 우드랜드, 축령산, 방장산, 백아산, 안양산 등
- 골프장(16개, 306홀) : 나주 4(81), 화순 4(81), 담양 2(27), 곡성 2(36), 장성 2(36), 함평 1(27), 영광 1(18) * 전남 운영중 골프장(663홀)의 46.2% 점유
- 기타 관광명소 : 나주읍성, 국립나주박물관, 화순고인돌유적, 죽녹원, 가사문화유적, 섬진강기차마을, 나주영상테마파크, 함평자연생태공원, 백수해안도로 등

식량위기 및 청정식품 수요 증가에 대응한 친환경농업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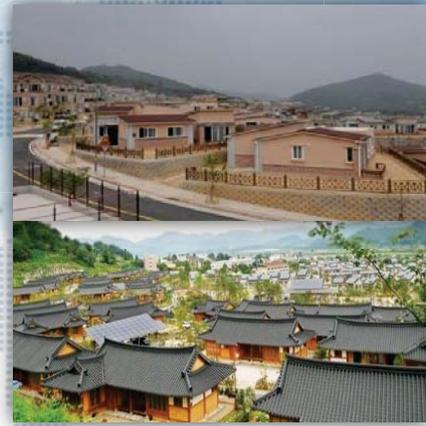
- 경지면적 92,191ha(전남의 29.8% 점유)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소재산업화센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추진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 7개 시·군 귀농가구('09~'12) 1,753가구(전남의 32.9%)
- 전원마을, 행복마을, 농어촌뉴타운 조성으로 귀농·귀촌인구 증가



▶ 연도별 귀농가구 현황



15

江 및 해안의 지속가능한 이용

- 영산강사업,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복암리 고분전시관 건립('14년 개관 예정) 등으로 유역문화 복원의 계기 마련
- 영산강사업 이후 자전거도로, 탐방로 등 이용객 증가
 - 영산강 수생태 보전 및 복원 과제
- 섬진강하류를 중심으로 동서통합지대 조성
- 영광대교·칠산대교 건설에 따른 본격적인 서해안시대 개막
 - 영광대교(영광 법성~백수, 590m, '15년 개통)
 - 칠산대교(영광 염산~무안 해제, 1.8km, '20년 개통)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생태·관광자원화

-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브랜드가치 제고
 - '12년말 민관의 협력모델로 국립공원 지정
 -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 광주·전남(담양, 화순)의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습지보호지역(담양하천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 지정
- 섬진강하천습지보전구역 지정 추진



16

전남 중부권 발전 잠재력

□ 장성군

- 광주시 산업단지, 과학기술, 서비스와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 산림, 수변 등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풍부
- 고품질 농산물과 특산물, 미개발 자원 보유

□ 담양군

-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구축
- 쾌적하고 풍부한 관광·휴양자원 보유
- 친환경 유기농산물(시설원예, 친환경 쌀) 주산지

□ 영광군

- 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의 접근성 개선
- 서해안 관광 및 산업 육성의 신흥 유망지 부상
- 전기자동차 선도시,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 지정



□ 함평군

- 나비축제 개최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 구축
- 교통, 토지자원 등 산업개발 입지여건 보유
-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

□ 곡성군

- 우수한 자연·생태관광자원 보유
- 선진 환경농업 기술력 확보
- 풍부한 산림자원 및 임업기반 보유

□ 나주시

- 광주·목포광역권과 영산강유역의 중심에 위치
-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으로 성장 촉진 전환점 마련
- 고대 역사문화자원 풍부

□ 화순군

-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 전남대병원, 녹십자, 생물의약센터 등 생물의약클러스터 구축
- 광주시 도심에서 근접하여 전원주거지로 부상

시 사 점

- 쾌적한 자연환경,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도시권 전원주거·여가·관광의 배후지역 육성
- 산업 및 R&D 기반, 친환경농산물, 환경·생태자원 등을 연계 활용한 융·복합산업 육성
- 광주시와의 연계 및 협력, 빛가람 혁신도시의 파급효과 증대 등을 통해 발전역량 극대화



II. 전남 중부권의 비전 및 발전 방향

1 비전 및 기본목표

대도시권 전원주거·휴양 및 미래산업 중심

기
본
목
표

- ✓ 광주대도시와 주변지역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연계발전 강화
- ✓ 광주시의 전략·특화사업을 활용한 신산업 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 ✓ 빛가람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발전 파급효과 극대화
- ✓ 도시민 레저·휴양 수요를 겨냥한 친환경 주거·여가공간 조성

2 전남 중부권 발전방향

광주시 중추기능, 산업, R&D와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 광주시의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연계
- 광주 R&D 특구,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중추기능 활용
- 담양산단-첨단·하남·평동산단-나주산단 등 첨단산업밸리 조성

혁신도시 성공적 조성 및 파급효과 확산

- 교육·문화·의료·쇼핑 등 혁신적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명품도시로 육성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거점 기능 강화
- 혁신도시 연관산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농생명 융·복합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비교우위 농산물 생산
-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 기후변화, 고령화, 식품안전 등에 대응한 첨단과학농업 육성

대도시권 전원형 웰빙주거단지 조성

- 대도시 근접성, 쾌적한 환경, 우수한 산림·휴양·레저자원 등의 여건을 활용한 전원주거단지 조성
- 농산촌의 지형, 풍수지리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마을 조성
- 동호인 주택, 수변주택, 생태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단지 조성

대도시권 여가·휴양·관광지 조성

- 영산강, 섬진강, 서해안 등 수변자원 활용
-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 복합관광지대 조성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전승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모두가 살고싶은 복지공동체 실현

- 농·산·어촌 특화개발 및 정주환경 개선
- 교육·문화·체육·복지 등 관련 시설의 복합화·집적화
- 취약계층·취약지역 등 수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 광주시 중추기능, 산업 및 R&D기반의 효율적 활용
- 대도시 배후기능 수행, 혁신도시 파급효과 극대화, 중부권 공동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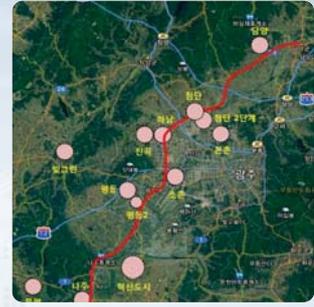


III. 전남 중부권 미래발전 프로젝트

1 중부권 핵심 프로젝트

Route 13 용 · 복합산업밸리 조성

- Route 13은 담양-광주-나주-완도를 잇는 국도 13호선 지칭
- 국도 13호선 주변 첨단 · 하남 · 평동산단, R&D특구, 비즈니스 지원시설, 혁신도시 등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
- 국도 13호선 주변에 담양, 나노, 빛그린, 대마, 함평, 나주 등의 산단 조성
- 혁신도시를 지식 · 지능기반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
 -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 산업단지 조성
 - 산 · 학 · 연 클러스터용지에 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 이전기관의 교류협력 및 기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



동북아 헬스케어 허브 조성

- 건강·의료산업 급성장, 고령층 및 환경성질환 의료수요 증가,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
- 기능성 식품, 산림휴양자원, 생물약인프라, 첨단의료기술 등을 접목하여 국제적 헬스케어 거점으로 육성
- 국립심혈관센터, 노화연구소, 환경성질환치유센터, 국가백신지원센터, 메디컬리조트 등 건립
- 광주근교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제2국립테라피단지 조성



농생명 용 · 복합산업 육성

- 기후변화, 고령화, 식품안전 등에 대응한 첨단과학농업 육성
 - 기술개발 및 적용 분야 : 기후변화대응 신품종, 병충해 예방기술, 대체농약 및 비료, 자원절감형 농자재, 농업자동화시스템 등
 -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첨단과학농업 집적화연구단지 조성
- 청정·건강 등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 웰빙·약선식품 등 기능성 식품소재 연구개발, 생산기반, 마케팅 지원 등 식품소재 혁신거점 조성
- 곤충산업, 천연염색산업 등 농생명 블루오션 산업 육성
 - 곤충산업 시장규모 : 1,600억원('13) → 3천억원('15) → 1조원('20)
 - 친환경도료, 천연항생제 사료 등 기능성 천연염색상품 개발
- 생산·도축·가공·유통이 결합된 광역 축산유통단지 조성
- 로컬푸드 중심의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強小農 육성



대도시권 창조적 여가·휴양지대 조성

- 수변 휴양관광지 조성
 - 장성호 교육연수휴양지, 나주호 산림휴양지, 불갑저수지 워터레포츠지구, 대동저수지 생태체험지구 등
-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 복합관광지대 조성
 -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템플스테이 등 연계
- 기존 관광지의 콘텐츠 강화 및 명품화
 - 섬진강 기차마을, 함평엑스포공원 등
- 가람길, 숲길, 해안누리길 등 탐방로의 명품화
- 서원·향교·누정 문화벨트 구축
- 고분, 운주사, 서원 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25

영산강 르네상스, 섬진강 에코천리 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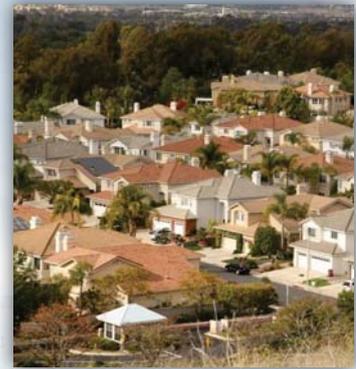
- 영산강의 자연생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찬란한 문화 복원
 - 영산강은 문화중심도시, 혁신도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연계하는 생태문화관광벨트로 활용
 - 주요 사업 : 강변도로 조기 건설, 영산강 고대역사문화공원 조성, 수변 문화예술회랑 조성, 영산강 고대역사 문화대제전 개최 등
- 섬진강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유역공동발전 프로젝트
 - 섬진강은 남해안 해양레저자원과 내륙 산악휴양자원 연결고리
 - 상·하류권 사업의 연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접목 추진
 - 3대 핵심사업 : 지리산관광특구 활성화, 섬진강 생태문화관광 지대 구축, 복합생태관광열차 운영
 - 주요사업 : 정자형 전망휴게소(여울마루) 조성, 가람빛길 조성, 수변예술의 거리 조성, 파머스장터 운영 등



26

명품 전원주거단지 조성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인구의 증가, 전원주거 또는 주말주택(4都 3村)에 대한 관심 증가
-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이 조화를 이룬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 주요 대상지역 : 광주제3순환도로 주변, 영산강·섬진강 등 수변
 - 제3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단계적 조성
 - 한옥단지, science village, 에코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형태 도입
- 교육·문화·의료·쇼핑 등이 복합된 명품 정주환경 조성
 -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집적
 - 명품 브랜드 쇼핑센터 조성



지역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 영산강, 섬진강, 해안, 호수 등 수변자원의 보전
 - 수변지역 보전·복원, 호소 수변생태벨트 조성, 생태관광자원화
 - 저수지 수변공간의 명소화, 도농교류 공간 조성
- 명소 발굴 및 아름다운 농·산·어촌 경관 조성
 - 수변 경관도로 조성, 경관작물 식재, 마을숲·하천숲 등 조성



27

모두가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 실현

- 지역 거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 쇠락하고 있는 중심지의 거점기능 강화
- 주요 면소재지의 종합정비 추진
- 농·산·어촌의 특화개발, 과소마을 정주권 재편 시범사업 추진
- 사회복지 관련 각종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취약지역 등 수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 예방관리, 도서·산간 의료사각지대 대응체계 구축 등
- 전문직 시니어 도·군정 자문,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중부권 연계·순환 교통망 확충

- 광주시 거점시설·산업 및 R&D기반의 효율적 활용, 대도시 배후기능 수행, 혁신도시 파급효과 극대화
- 주요 사업 : 광주제3순환도로(장성~나주~화순~담양),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무안공항~혁신도시~순천간 도로, 광주도시철도 화순·나주 연장, 서해안 일주도로, 영산강 강변도로 등



28

2 시·군별 핵심 프로젝트

시·군별 특성 및 발전잠재력 분석에 기초하여 비전 및 기본목표, 발전방향, 성장동력 프로젝트 제시
(전남발전연구원, 2014)

나주시 : '첨단 융·복합산업의 발신기지'

**기
본
목
표**

- ✓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파급효과 극대화
- ✓ 산업 및 R&D 기반, 농식품자원을 연계한 융·복합산업 육성
- ✓ 영산강과 고대역사문화자원의 연계를 통한 창조관광지대 조성
- ✓ 광주대도시권 배후의 전원주거 및 휴양레저 거점 조성



프로젝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연관 산업단지 조성 ● 융·복합산업의 중심도시 육성 ● 첨단과학농업 및 식품소재산업 거점 조성 ● 교육·복지의 혁신모델 구축 ● 도·농 상생의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 영산강 고대역사문화공원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변 문화예술회랑 조성 ● 영산강 고대문화대제전 개최 ● 수변·주거·휴양·레저거점 조성 ● 생태·농촌관광의 베이스캠프, 캠핑촌 조성 ● 영산강 생태·경관자원의 명소화 ● 한센인 축산단지(호혜원) 환경개선 |
|---|--|

담양군 : '대도시권 전원주거·문화·레저·관광 중심'

**기
본
목
표**

- ✓ 복지, 문화·감성, 융·복합 등 시대 트렌드에 대응한 담양창조
- ✓ 안전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최상의 주민의 삶터 제공
- ✓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 조성
- ✓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생태경관을 보유한 생태정원도시 조성



프로젝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정원도시 담양창조 10대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자정원, 국립자생식물원 등 조성 ● 담양 10대 명품길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정탐방길, 금성산성 자연탐방로 등 ● 담양 대표축제의 명품화 ● 거점 관광단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나무공예센터, 복합생태문화체험단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있는 삶터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나무숲 농업유산 지정, 천년의 숲 조성 등 ● 향토음식문화의 관광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레스토랑 조성 등 ● 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
|---|--|

곡성군 : '동북부 청정농업 · 녹색관광 중심'

기
본
목
표

- ✓ 청정산림 · 물 · 역사 · 문화자원을 활용한 가족형 체험 · 휴양거점 조성
- ✓ BT · ET 융 · 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 치유·휴양산업과 연계한 건강 · 장수 실버토피아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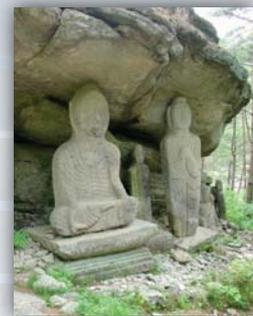
프로젝트

- 섬진강 기차마을 확장 및 콘텐츠 강화
- 압록 가족형 종합레포츠타운 개발
- 숲속놀이터 「에코 어드벤처파크」 조성
- 생태자원 보전·활용을 위한 생태벨트 구축
- 효·의(孝·義) 역사문화 테마지대 조성
- 미래 생명농업 기반 「생물방제산업」 육성
- 곡성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 만성질환 치유단지 조성
- 실버세대 유입을 위한 테마형 주거시설 조성
- 읍·면 거점지역 중심지 기능강화

화순군 : '대도시권 전원주거 및 헬스케어 허브'

기
본
목
표

- ✓ 광주시, 혁신도시 등과 연계 · 협력을 통한 발전 역량 극대화
- ✓ 산업 및 R&D 기반,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산업 육성
- ✓ 자연생태, 역사문화 등 자원의 발굴 · 보전 및 창조적 상품화
- ✓ 대도시권 배후의 전원주거 및 휴양레저 거점 조성
- ✓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확충



프로젝트

- 수요자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 국토 서남권의 헬스케어 허브 조성
- 약선산업(Medical Food Industry) 육성
- 주암호 · 동북호 청정산업특구 조성
- 광주대도시권 거점 시니어타운 조성
- 시니어 스포츠파크 조성
- 운주사 천불천탑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화순-북암선 관광철도 활용
- 화순적벽 생태관광 명소화
- 관광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전원형호텔 유치

함평군 : '서남권 생태전원 창조도시'

기본
목표

- ✓ 자연·생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도시 실현
- ✓ 친환경 무공해 농·축산으로 식품·생활 안전지대 구축
- ✓ 대도시권 배후 자연휴양 체험의 건강활력 지역 구현
- ✓ 친환경, 자연생태, R&D의 융·복합 창조경제 실현



프로젝트

- 빛그린·동함평 산단 조기준공과 기업유치
- 엑스포공원 생태·문화·예술발전소 리뉴얼
- 광역 생태교육체험 관광지구 지정
- 읍·면 중심지 행복생활 도시재생사업
- 돌머리 해양복합 휴양관광지 조성
- 영광~함평~무안 해안권 관광벨트 구축
- 산지 축산물 광역유통거점 조성
- 대도시근교 전원형 웰빙주거단지과 주말농장 조성
- 친환경 6차산업화 허브 구축
- 노장(노인, 장애인) 희망(HOPE)복지 인프라 구축

영광군 : '천년영광이 지속되는 에너지·문화관광 창조도시'

기본
목표

- ✓ 광주대도시권 배후의 여가·정주·웰빙지역으로 특화
- ✓ 신성장 창조산업으로 에너지산업 육성
- ✓ 종교성지와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 ✓ 미래 첨단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기반 활성화
- ✓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융·복합화



프로젝트

- 영광 노을해안 여가·복합지대 조성
- 미(味)·동(動)이 융합된 관광거점지역 구축
- 미래 에너지산업 성장기반 구축
- e-mobility, 고효율연료 자동차 생산거점기지 육성
- 중소 그린레저선박 및 수리 조선소 운영
- 영광 먹거리 산업 활성화 추진
- 영광 한빛 마이스터교 개교
- 4都 3農, 커뮤니티 조성
- 호버크래프트 신운송수단도입 및 이동 거점지구 조성
- 원전 온배수 활용 원예단지·양식장 난방사업 추진

장성군 : '숲과 물, 인간이 함께하는 Greentopia 장성'

기
본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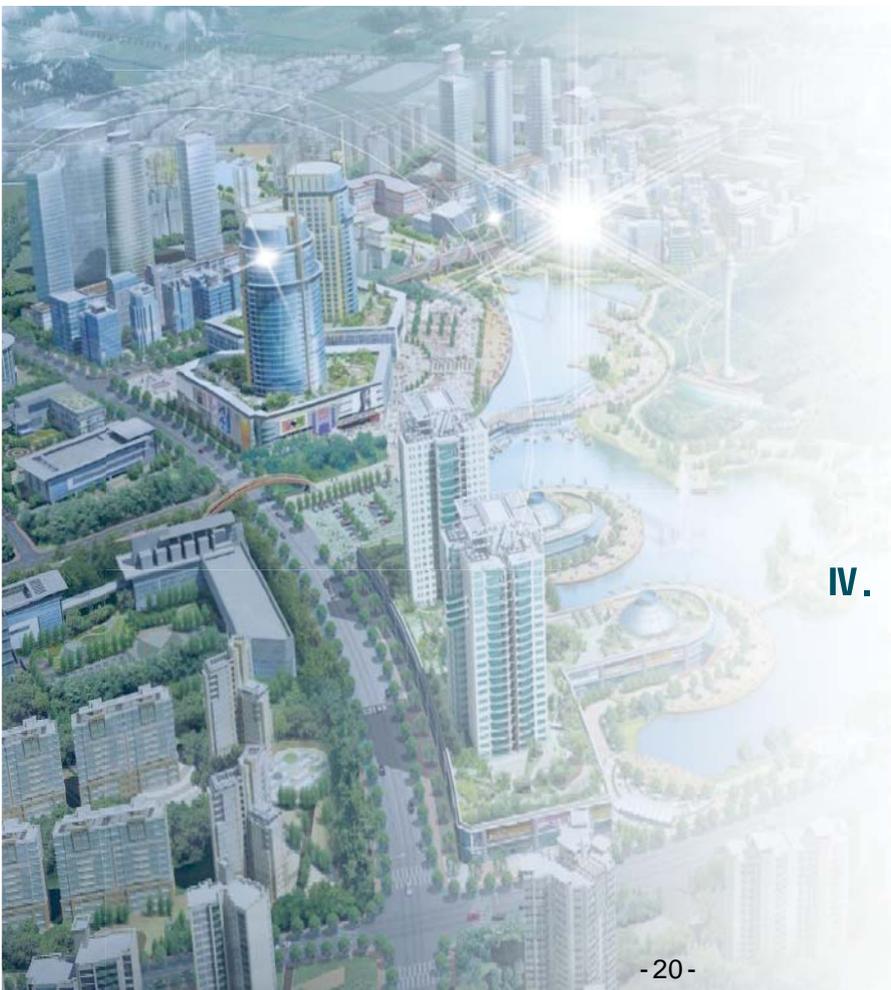
- ✓ 산림자원을 활용한 웰빙·힐링 미래산림도시 창조
- ✓ 수자원과 전원풍경을 활용한 생태녹지 및 휴양·여가벨트 구축
- ✓ 고품격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및 융·복합 문화관광 기반 확충
- ✓ 복합 근교농업, 저공해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프로젝트

- 웰빙·휴양형 산림정원도시 창조
 - 축령산 힐링휴양촌, 산림테라피공원 등
- 살고 싶은 미래형 정주환경 조성
-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향토·전략산업 육성
 - 나노산업단지 활성화, 잔디산업 클러스터 등
- 지역매력 증진을 위한 경관디자인
- 관광지 명소화 및 경쟁력 강화
 - 장성호 복합레저관광단지, 상무대 명소화 등
- 축제 명품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구축
-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 문화·복지네트워크 구축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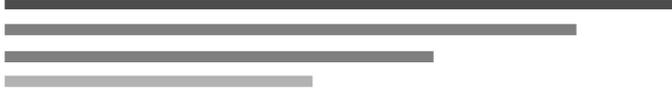
IV. 추진방안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프로젝트 조기 추진
- 신규 프로젝트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공약 등과 연계 추진
- 관련 부서간 협업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규모화 및 파급효과 극대화
- 광주광역시 및 인근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행복생활권 자치단체간 공동사업 추진
-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투자
- 전국 최소기준 미달 농·산·어촌의 국고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
- 각종 규제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감사합니다.

[Http://www.jeri.re.kr](http://www.jeri.re.kr)





참고자료

민주당, 2013년 12월 임시국회 성과



민주당 2013년 12월 임시국회 성과

위기의 빠진 대한민국에 응답했던 국회!

- 3과 정권에(민주주의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4生으로(민주주의살리기, 민생살리기, 약속살리기, 지방재정살리기) 응답! -

1. 정치복원의 희망과 민주당의 존재감, 그 필요성을 입증
2. 국회차원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
3. 여야 중재(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를 통한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4. 민생·민주주의살리기 최우선법안 17건 관철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정원등 국가기관개혁법
 - 주택법, 주택임차료보조에 관한 법, 유로도로법, 국민연금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이자제한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5. 세계개편을 통해 영세자영업, 중소·중견기업 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 농민,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최소화
 - 음식점업, 중고자동차매매업 등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6. 부자감세 철회 첫걸음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 및 4生(민생, 민주, 약속, 지방재정)의 예산 지원
7. ‘눈먼 돈’ ‘검은 돈’ 삭감을 통해 민생예산 증액
 - 현실성 없는 ‘박근혜표’ 예산
 - 불법 대선개입, 정치적 중립 망각 국가기관 경고 예산

10대 성과

- ① 국정원개혁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②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최소화
- ③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복지확대 관철
- ④ 쌀 직불금의 인상과 농민지원 확대
- ⑤ 철도 파업 중재 및 철도민영화 저지 기반 마련
- ⑥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강화
- ⑦ 학교비정규직 지원 등 비정규직 지원 기반 마련
- ⑧ 찜통, 냉동학교 전기요금 지원 및 경로당 난방비 등 효도예산 확보
- ⑨ 대부업법, 이자상한제법, 주택법 등 민생의 어려움 경감
- ⑩ 사병복지, 주거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입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주당 상임위별 중점추진법안 176건 중 28건 통과
(민생·민주주의 살리기법 70건 중 17건) 성과를 거둔 국회였습니다

이번 12월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혁을 다루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입법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서도 불구하고 민생 민주주의 살리기 최우선법안 23건이 관철되는 성과를 거둔 국회였음

1. 민주주의 살리기의 핵심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겸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로 하고,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와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불법 부당한 직무집행 거부권을 보장하게 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안을 마련하고,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등을 통한 정치개입 금지를 국정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국정원 개혁을 위한 7대 법안 개정

법안	세부내용
국정원법 일부 개정	▶ 직원의 정보통신망 이용 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 ▶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 정치에 관여한 경찰, 군인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등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	
군형법 일부 개정	▶ 불법감청과 관련 처벌규정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 공익 목적 신고시 국정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 의무 규정 적용 배제

2. 주택법을 통과시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해 기존 주택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로 전월세난 해소에 기여하고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음
3. 주택임차료보조에관한법률 통과로 무주택 임차인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주도할 수 있음
4.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음.
5. 국민들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가중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이자상한율을 39%에서 34.9%로 낮추고,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 방지법(일명 피에타법)과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제한법 등을 통과시켰음
6. 박근혜정부는 임기 1년 동안 135조원이 드는 복지공약을 다 지키겠다고면서도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었음. 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 저지하고,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MB정부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이끌어 냈으며,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실효세율도 1%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음.
7. 우리나라 경제는 중견기업이 튼튼한 허리역할을 할 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고,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순환출자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 재벌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확장, 경영권 편법 승계, 부실계열사 지원관행 등에 제동을 걸어 재벌의 소유 지배 괴리현상을 개선하고 경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8. 근로기준법 통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유급휴가도 60일에서 75일로 확대됨

9. 지방정부의 자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고갈을 막고,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여당의 반대를 설득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통과시킴. 이로써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막았으며, 추가로 부가세가 매년 5%가량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연 2조원 가량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음. 한편,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10.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통과시켰음

11. 유료도로법을 통과시켜 고속국도법 통합, 도로계획 체계화, 점용제도 개선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 및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 통과시켜 재벌 봐주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음.

12.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민들의 땀에 대가인 쌀 목표가격 문제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농민들의 요구인 19만 5천원을 관철하지 못하고 18만8천원에 안타까운 합의를 이루었음.

3대 세제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 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조세소위원회에 마지막까지 싸워서 관철한 주요 내용은, 부자감세철회를 통한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경감, 월급쟁이 세부담 경감입니다

-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철회를 통한 서민복지재원 마련’ 과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 의 두 가지 기조를 갖고 철저하게 대응하였음
-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 의 재벌대기업·슈퍼부자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여,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민·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원으로 마련함으로써 중산층·서민 쥐어짜기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음
- 부자감세 철회하고, 중산층·서민 쥐어짜기를 막았습니다!
 -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하고, 과세표준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7%로 1% 상향시켜 ‘이명박 정부’ 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 의 재벌대기업·슈퍼부자에 대한 감세를 철회
 - ▶ 중산층·서민 쥐어짜기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민·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
-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중소기업은 완전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시켜 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 ▶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세부담을 경감
 - ▶ 대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낮추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시켜 세부담 증가를 막아냄

- 음식점업, 중고자동차매매업 등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증가를 막아냈습니다.
 - ▶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경감
 -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경감 및 중고품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

△ 3대 세재개편안 제·개정

법 안		세부내용
부자감세 철회	소득세법 등	▶ 최고세율 38%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에서 1.5억으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등	▶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17%로 상향조정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영세자영업자· 농민 세부담 경감	소득세법 등	▶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경감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경감 및 중고품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

민생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 확대

- ☞ 무상교육 국고보조율을 10%p(정부안)에서 15%p로 5%p추가인상하여 3,472 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3%p(정부안)에서 6%p로 3%p 추가인상 하였습니다

□ 초중학교 급식 실시 지자체 및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초등 방과후 돌봄 사업’ 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동 사업의 소요재원 초중학교 급식실시 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학교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 ☞ 14만명에 대해 월2만원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찜통·냉골 교실 해소

- ☞ 학교 전기요금 지원에 1,1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보육지원 확대

- ☞ 0~2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어린이집 원장 담임수당 월 7만 5천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110억 증액 등 보육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어르신을 위한 효도예산 확보

- ☞ 전국 62,000여 경로당에 월 30만원(5개월)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1.5만명 확대 등 효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병복지 예산 확보

- ☞ 사병급식비 6.5% 인상에 333억원, 보충역 피복예산 81억원, 50년된 수통 교체 13억원, 병영문화쉼터 250억원 등의 예산 확보로 사병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 주거복지 예산 확대

- ☞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확대로 4,645억원, 주택바우처시범사업으로 60억원, 재정비축진사업지원으로 15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으로 100억원 등의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보

-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93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3억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586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50억원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증액 성과

□ 보육 및 교육관련 예산

- 1. 무상보육 국고보조를 10%p(정부안)→15%p로 5%p 추가인상: +3,472억원 증액**
 - 보육료 지원: +252,776백만원('14년 1,120,857)
 - 가정양육수당: +94,462백만원('14년 1,120,857)
- 2.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처우 개선 등 보육지원**
 - 0~2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12만원→15만원)
 - 민간어린이집 원장담임수당 월 7만 5천원 지급(예비비로 지급)
 -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14년243억원)
- 3. 초중학교 급식 실시 지자체 및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2,000억원**
- 4. 찜통냉골 교실 해소를 위한 학교 전기요금 지원: +1,110억원**

5. 학교비정규직(14만명) 장기근무가산금 월2만원 인상: +400억원

- 14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월 2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 복지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1. 효도예산-어르신 지원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6억원(신규, 안행부 특교 292억 포함)
- 노인일자리 확대: 55억원('14년 300억원)
-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타당성 조사: +1억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660백만원(+6,587백만원)

2. 애국복지: +328억원

- 참전명예수당 : +300억원('14년 4,822억원)
- 무공영예 수당: +27억원('14년 614억원)

3. 사병 복지 증진

- 사병급식비 6.5% 인상: +333억원
- 보충역 피복예산(+81억원), 기능성 방한복(+1,9억원)
- 50년된 수통교체(+13억원)
- 디지털 TV 보급: +22억원('14년 23억원)
- 병영문화쉼터: +250억원('14년 140억원)
- 병영생활관 개보수: +138억원('14년 1,334억원)

4. 주거복지

-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확대:+4,645억원('14년 3,390억원)
 - * 타당성 없는 행복주택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임대주택 예산 증액
- 주택마우처시범사업: +60억원('14년 236억원)
-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50억원('14년 1,100억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100억원('14년 400억원)
- 도시재생사업: +63억원('14년 243억원) 등

5. 사회취약계층 지원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93억(+93억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75억('14년 596억)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0억('14년 30억)
- 여성장애인 출산, 교육비용 지원: +10억('14년 5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50억(신규)
-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20억원('14년 624억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 +19억원('14년 391억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억원('14년 133억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14년 64억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 +48억원('14년 374억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3억원('14년 237억원)
-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3억원('14년 200억원)
-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발급대상 10만영확대(140→150만명):+35억원
('14년 정부안 421억원)
-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11억원('14년 정부안 119억원) 등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사에 '폐렴구균' 추가: +586억원
('14년 정부안 1,230억원)
-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3억원('14년 200억원)

□ 경제활성화 지원 예산

1. 8년째 동결된 쌀 목표가격 인상(17→18.8만원) 및 농업정책금리 인하, 이
모작 발작물 고정직불금 인상(20→40만원) 등 농민지원: +1,313억원
 - 쌀목표가격 인상액을 80kg 1가마 기준 188,000원으로 인상
 - ※ 1000원 인상 시 387억원 인상효과 → 약 7000억원 인상 효과

2.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5억원('14년 58억원)
- 시니어 창업지원: +2억원('14년 45억원)

- 창업인프라 지원: + 45억원('14년 202억원)
- 소상공인 조직화·공동화 기반구축: +7억원('14년 103억원)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8억원('14년 161억원)
- 소상공인 행동조합 활성화: +10억원('14년 261억원)

□ 민주 인권 예산

- 제주 4·3 평화재단 지원: +20억원('14년 50억원)
- 부마항쟁명예회복지원: +8억('14년 30억)
-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지원:+1억('14년 73억원)
- 위안부피해자 기록화 사업:=10억원('14년 2억원)

□ 민주 시민단체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시킨 족쇄였던 '예산 집행 지침' 폐지(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의 보조금 지원 제한 항목의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문구를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로 변경하고,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성원이 처벌받은 단체” 문구를 삭제한다.

□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 2014인천아시안게임: + 416억원('14년 821억원)
- 2014인천장애인경기: + 60억원('14년정부안 108억원)
- 2015광주U대회:+105억원('14년 정부안 714억원)

삭감 성과

1. 허황된 유명무실 박근혜표 사업 삭감

-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
 - 새마을 빙자 최경환의원 지역구 사업인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 △ 18억원
 -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중 전시성인 “새마을운동지도자세계대회” 행사 예산 △5억원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100억원
-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3대 대통령자문위원회
 - 국민대통합위원회 : △155백만원
 - 청년위원회 : △450백만원
 - 문화융성위원회 : △220백만원

2. 불법 대선개입, 정치적 중립 망각 국가기관 경고 및 관련사업의 삭감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의 정치적 중립 망각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나라사랑 교육을 담당하는 보훈선양국의 기본경비 10%인 △15백만원을 “징벌성” 삭감
 - 대선개입의 직접 관련 사업인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에서 정부안 (3,7억원) 대비 △32.3%인 △12억원 삭감
 - 독재 미화 의혹이 있는 “이승만박사 전집” 발간사업 1억원 삭감
- 국군사이버사령부
 - 인건비 : △15억, 사업비 : △5억, 시설비 및 장비구축비: △9억원
- 통일부
 - 사회통일교육내실화 : △4억원, 통일정책수립인프라구축사업 : △1억원
 -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2억원 등

3. 정권 홍보 방지를 홍보예산 대폭 삭감

- 국민기만, 원자력 홍보 예산 △10억원 최초 삭감
- 정권호보 예산 △50억원 일괄 삭감

4. 기타

- 경찰청 채증용 고성능카메라 구입 예산 △290백만원은 철도파업관련 경찰의 불법적인 경향신문과 민주노총 난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전액 삭감
- 역사적 편향성으로 문제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대사연구 활성화 사업에서 △450백만원
- 원전관련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 △4억원
- F-X 사업 : △3,664억원
- 제주해군기지 건설 : △500억원

I

지방재정을 지키다

• 지방재정 확충 2대 성과

주 제	세부내용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정부안)→15%p로 5%p 추가인상: +3,472억원 증액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 3%p(정부안)→6%p로 3%p 추가인상
초중학교 급식 실시 지자체 및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초등 방과후 돌봄 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동 사업의 소요재원 초중학교 급식실시 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에 사용 ▶ 지원수준은 '13년 수준(2010억원) 수준 유지

II

민생살리기 약속 지키다

• 교육과 복지 예산 확보, 민생살리기 관련 예산

주 제	세부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만명에 대해 월2만원 인상 ▶ 학교 전기요금 지원 +1,110억원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12만원→15만원) 및 민간어린이집 ▶ 원장 담임수당 월 7만 5천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10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62,000여 경로당에 월 30만원(5개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586억원) ▶ 어르신 일자리 1.5만명 확대(29.5→31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병급식비 6.5% 인상(+333억원), 보충역 피복예산(+81억원) ▶ 50년된 수통 교체(+13억원), 병영문화쉼터(+250억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확대(+4,645억원), 주택바우처시범사업(+60억원), 재정비축진사업 지원(+15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100억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93억('14년 정부안 93억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3억원('14년 정부안 237억원)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586억원('14년 정부안 1,230억원) ▶ 저소득층 기저과조제 분류 지원: +50억원(신규)
--------------------	---

Ⅲ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다

• 주요 예산 삭감 내용

주 제	세부내용
허황된 유명무실 박근혜표 사업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중 전시성인 “새마을 운동지도자세계대회” 행사 예산 △5억원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100억원 ▶ 제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3대 대통령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대통합위원회 : △155백만원 - 청년위원회 : △450백만원 - 문화융성위원회 : △220백만원
불법 대선개입, 정치적 중립 망각 국가기관 경고 및 관련 사업의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에서 정부안 (3,7억원) 대비 △32.3%인 △12억원 삭감 등 ▶ 국군사이버사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5억, 사업비 : △5억, 시설비 및 장비구축비: △9억원 등 ▶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일교육내실화 : △4억원 등 -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2억원 등
정권 홍보 예산 대폭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만, 원자력 홍보 예산 △10억원 최초 삭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채증용 고성능카메라 구입 예산 △2억 9천만원 전액 삭감 ▶ 원전관련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억원 ▶ F-X 사업 : △3,664억원 ▶ 제주해군기지 사업 : △500억원

1	입법성과
----------	-------------

민주당은 이번 12월 임시회에서는 민생 민주주의 살리기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

이번 12월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혁을 다루고,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입법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서도 불구하고 민주당 상임위별 중점추진법안 176건 중 28건이 통과(민생 민주주의 살리기법 70건 중 17건)되는 성과를 거둔 국회였음

1. **주택법**을 통과시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해 기존 주택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로 전월세난 해소에 기여하고 리모델링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주택임차료보조에관한법률** 통과로 무주택 임차인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무주택·임차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할 수 있음
3.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음.
4. 국민들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가중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이자상한율을 39%에서 34.9%로 낮추고,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 방지법**(일명 피에타법)과 서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제한법** 등을 통과시켰음
5. 박근혜정부는 임기 1년 동안 135조원이 드는 복지공약을 다 지키겠다면서도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었음. 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 저지하고,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MB정부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이끌어 냈으며,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실효세율도 1%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음.
6. 우리나라 경제는 중견기업이 튼튼한 허리역할을 할 때 국가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음.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고, 경제 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 순환출자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켜 재벌 대기업

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확장, 경영권 편법 승계, 부실계열사 지원관행 등에 제동을 걸어 재벌의 소유 지배 괴리현상을 개선하고 경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7. **근로기준법** 통과로 두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유급휴가도 60일에서 75일로 확대됨
8. 지방정부의 자치를 보장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고갈을 막고,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여당의 반대를 설득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인상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통과시켰으며,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9.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통과시켰음
10. **유료도로법**을 통과시켜 고속국도법 통합, 도로계획 체계화, 점용제도 개선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 및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 통과시켜 재벌 봐주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음.
11.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농민들의 땀에 대가인 쌀 목표가격 문제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농민들의 요구인 19만 5천원을 관철하지 못하고 18만8천원에 안타까운 합의를 이루었음.
12. 민주주의 살리기의 핵심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겸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로 하고,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와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불법 부당한 직무집행 거부권을 보장하게 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안을 마련하고,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출입 등을 통한 정치개입 금지를 **국정원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민주당은 국정의 파트너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였음

민주당은 발목잡기만 하는 민주당이 아닌 국정의 파트너로서 정부여당의 안이라도 합리적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였음.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자와 함께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증손회사 최소 보유 지분을 하향(100→50%)조정하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창업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제한을 완화 시켜주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현금청산시기 연기를 통해 재개발조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정부여당의 중점추진법안 103건 중 34건(16개 최우선 중점추진 법안 중 8건)을 통과시켰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은 국회였음.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초중교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금지 법안의 일환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점 ▲학교 내 난방 전기료 지원 등 등 국민들의 일자리, 먹거리, 보육 등에 성과를 내지 못해 야당의 한계를 절감하였음

경제민주화 및 을 살리기 법안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로 인한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기초연금 등 서민복지재원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한 한계를 보였음.

이 밖에도 경제민주화 및 을 살리기 법안, 서민복지 재원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방송 공정성강화 등 상임위에서 최우선 추진해야 할 법안을 선정해 2014년 첫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할 것임.

민주당은 2014년에도 국민과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걸음 씩 미래를 향한 진전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서민들의 보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으로 거듭나 야당의 존재감을 회복하고 수권대안정당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임.

새누리당도 집권여당임을 명심하고, 민생 살리기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바랍.

2014. 1. 2.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 병 안

<참고자료>

중점법안 심사 현황

□ 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

○ 12월 임시국회 상임위별 중점추진 법안

- 176건 처리현황

· [본회의 통과 28건, 법사위 계류 3건 나머지 소위 계류 145건]

본회의 통과 28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시 자치 입법, 조직, 재정권
■ 부가가치세법	◆ 지방소비세 세율 100분의 16으로 상향
■ 주택법(3)	◆ 수직증축 허용
■ 유료도로법	◆ 통행료 관련
■ 국민연금법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 이자율 상한 39%→34.9%로 낮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 강화
■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하향 조정함
■ 고등교육법	◆ 시간강사에 관련한 조항 유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 주택임차료보조에 관한 법률(2)	◆ 주거 바우처제 도입
■ 대중교통이용촉진법	◆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 조세특례제한법	◆ 뉴타운 재개발관련 시공사의 대여금 손금인정하는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17%로 상향조정
■ 소득세법	◆ 최고세율 38%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에서 1.5억으로 조정
■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 및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함
■ 인지세법	◆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기업상속 공제한도를 확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매몰비용손금처리액 확정절차 마련
■ 의용소방대 설치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쌀 목표가격 80Kg당 188,000원으로 상향
■ 국가정보원법	◆ 정치관여금지

○ 12월 임시국회 상임위별 최우선 추진법안(70)

* 8대 민생 민주주의 살리기 추진법안 22건 처리현황

- [본회의 통과 4건, 17건 소위 계류, 1건 법사위 계류]

본회의 통과 4건	
■ 소득세법	◆ 최고세율 38%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3억에서 1.5억으로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17%로 상향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 국가정보원법	◆ 정치관여금지

* 상임위별 최우선 추진법안 48건 처리현황

- [본회의 통과 13건, 소위계류 35건]

본회의 통과 13건	
■ 주택법(3)	◆ 수직증축 허용
■ 주택임차료보조에관한법률(2)	◆ 주거 바우처제 도입
■ 유료도로법	◆ 통행료 관련
■ 국민연금법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 이자율 상한 39%→34.9%로 낮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 강화
■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하향 조정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쌀 목표가격 80kg당 188,000원으로 상향

□ 정부 여당 1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

- 정부, 2013. 10. 23.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경제분야 중점추진법안 102개를 발표함.
- 2013. 10. 28. 국무총리 담화 발표시 14개 법안 언급함
- 정부, 2013. 11. 5.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15개 법안 당정협의 후 발표

○ 정부여당 상임위별 중점추진 법안(102+총리담화)

- 103건 처리현황 [본회의 통과 34, 법사위 계류 2, 소위 계류 67]

본회의 통과 34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만료시한을 3년 추가 연장
■ 소득세법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증과 폐지
■ 한국수출입은행법	◆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강화
■ 인지세법	◆ 저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 법인세법	◆ 가산세 부과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적용시기 조정

■ 개별소비세법	◆ 사행장소입장행위 세액인상, 장기대여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조건 단축
■ 국가재정법	◆ 기술료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하는 조항 삭제(세입으로 조치)
■ 농어촌특별세법	◆ 법률 유효기간 10년 연장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손자회사의 외투합작법인은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하는 투자, 손자회사가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소유, 외국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 손자회사가 외국인 소유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 등 4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손자회사의 합작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해사안전법	◆ 선박안전관리체제 심사 완화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돼지이력제 도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 제한 완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문엔젤 도입 및 벤처확인제도 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보세구역내 수출목적의 석유제품 혼합행위 허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 중소기업 기본법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 도시가스 사업법	◆ 직수입 물량 국내 처분 제한 완화 및 해외 재판매, 천연가스반출입업 허용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현금 청산시기 조정
■ 주택법	◆ 수직증축 허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총량제강화, 과잉공급해소 등
■ 주택법	◆ 주택바우처제도 근거규정 마련
■ 건축법	◆ 재해취약지역 건축허가 의무화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튜닝 부품 안전성 확보
■ 항공법	◆ 이착륙장 설치 근거 마련
■ 도로법	◆ 고속국도법 통합
■ 주택법	◆ 장수명주택 건설기준 근거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을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고형연료제품 제조 허용 등
■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현상 관측·경보 체계 마련
■ 남녀고용평등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 도입 ◆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상향(만6세이하→만8세이하)

○ 정부여당 상임위별 중점추진 법안(16개)

- 16건 처리현황 [본회의 통과 8 , 법사위 계류 0건, 소위계류 8]

본회의 통과 8	
■ 지방세법	◆ 취득세율 인하
■ 소득세법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손자회사의 외투합작법인은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하는 투자, 손자회사가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소유, 외국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 손자회사가 외국인 소유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 등 4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손자회사의 합작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
■ 주택법	◆ 수직증축 허용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안	◆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의 기능 제고
■ 한국수출입은행법	◆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강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창업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 제한 완화

2	세제개편 성과, 중소·중견기업 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	--

-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철회를 통한 서민복지재원 마련’과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의 두 가지 기조를 갖고 철저하게 대응하였음

-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슈퍼부자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여,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민·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원으로 마련함으로써 중산층·서민 쥐어짜기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음

-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자신의 대선공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철회해야 할 부자 감세는 그대로 놔둔 채, 모든 부담을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함

-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정부 세제개편안 및 조세소위원회 조세법 심사과정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등을 성역으로 만들어 친재벌·친부자 정부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냄

민주당이 조세소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싸워서 관철한 주요 내용은,

□ 부자감세철회를 통한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경감

항목	현행	개정안	가재위 조세소위 심사 결과	성과																		
소득세 세율 및 공제제도 조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세율 <table border="1">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4,600만원</td> <td>15%</td> </tr> <tr> <td>4,600~8,800만원</td> <td>24%</td> </tr> <tr> <td>8,800만원~3억원</td> <td>3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38%</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	<input type="checkbox"/> 이용섭의원안(민) <table border="1">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r> <td>8,800만원~1억5,000만원</td> <td>35%</td> </tr> <tr> <td>1억 5,000만원 초과</td> <td>38%</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 5,000만원 초과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5천만원 초과 38% 세율 적용 	부자감세 철회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 5,000만원 초과	38%																					
대 기 업 최 저 한 세율인상	<input type="checkbox"/> 법인세 최저한세율 <input type="checkbox"/>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table border="1">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r> <td>100억원 이하</td> <td>10%</td> </tr> <tr> <td>100억원~1,000억원</td> <td>12%</td> </tr> <tr> <td>1,000억원 초과</td> <td>16%</td> </tr> </table>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input type="checkbox"/> 최재성의원안(민) <input type="checkbox"/> 1000억원 초과 18%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억 원 초과 17%로 상향 	슈퍼 대기 업 실효세 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																					
대 기 업 연 구 개 별 비 세액공제율 하향	<input type="checkbox"/> 당기분 방식 일반기업 3~6%	<input type="checkbox"/> 홍중학의원안(민) <input type="checkbox"/> 당기분 방식의 세액 공제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분 방식 일 반 기 업 3~4% 	대 기 업 감면 축 소																		

□ 월급쟁이 세부담 가중 경감

항목	현행	개정안	가재위 조세소위 심사 결과	성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하향조정 연기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신용카드: 15%	<input type="checkbox"/>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신용카드: 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유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 가중 경감
근로자에 한정하여 장기펀도 소득공제	<신설>	<input type="checkbox"/> 이한성의원안(새) <input type="checkbox"/>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저소득근로자 나 저소득층의 재산형성 지원

항목	현행	개정안	가재위 조세소위 심사 결과	성과
를 지원		사업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input type="checkbox"/> 김광림의원안(새)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및 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적극 협조하여 통과 	영세 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안정도모

□ 영세자영업자·농민 등 세부담 가중 경감

항목	현행	개정안	가재위 조세소위 심사 결과	성과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경감	<input type="checkbox"/> 한도 없음	<input type="checkbox"/>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매출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4억초과: 매출의 40% ▪ 매출 4억이하: 매출액 50% ▪ 매출 2억이하: 매출액 60% 	영세음식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농수산물 공급자인 농민 등 지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경감 및 중고품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	<input type="checkbox"/>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6/106 - 중고자동차 : 9/109	<input type="checkbox"/>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3/103 - 중고자동차: 5/105 <input type="checkbox"/> 일몰기한 - 201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폐자원 : 5/105(2년간) ▪ 중고자동차 : 9/109(마진과세 도입시까지 1년간 유예, 내년 마진과세 논의)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증가 억제
발전용유연탄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정부안	▪ kg 당 24원	전기료 추가

항목	현행	개정안	가재위 조세소위 심사 결과	성과
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		<input type="checkbox"/> kg 당 30원 부과		인상요인 억제
소기업·소상공 인 공제조합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한도 상향 조정	<input type="checkbox"/> 납입액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 연 210만 원	○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 조정식의원안 <input type="checkbox"/> 소기업·소상공인 공 제조합 납입금에 대 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이 소득공제 유지 ▪ 납입한도 확대 (210만원→300 만원, 시행령) 	납입한도 확대 하고 12%세액 공제 도입을 저지하여 소 기업·소상공 인 권익 향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이상	○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2014. 1. 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시기 6개 월 연장(2014. 7. 1. 시행) 	영세 자영업자 부담에 따라 시행시기 연기
전자신고 세액 공제제도 등 유지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에 대 한 세액공제, 전자신 고에 대한 세액공 제	○ 정부안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세액 공제 제도 유지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농어촌특별세 법의 유효기간 10년 연장	<input type="checkbox"/>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 ○ 2014년 6월 30일	○ 정부안(김춘진의원, 김종태의원안) <input type="checkbox"/>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 ○ 2024년 6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특별세 법은 민주당에서 확고히 지키고자 하는 법안으로 정부안에 적극 협조 	농 어 촌 에 다양한 재정 지원 실시 필요

□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항목	현행	개정안	가재위 조세소위 심사 결과	성과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 차등 적용	○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10% ○ 에너지절약시설 투 자세액공제 10%	○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 10% → 3% ○ 중견기업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기 업 : 10% → 3% ▪ 중 견 기 업 : 10% → 5%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 현행유지, 중 견 기 업

항목	현행	개정안	가재위 조세소위 심사 결과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10%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 공제 7%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 중소기업 : 10% → 5% (의약품투자는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10% → 10% (의약품투자는 7%) 	공제율 하향폭 축소
일감몰아주기 과세	<input type="checkbox"/>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거래비율 30% ○ 한계보유비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요건완화 - 중소기업 ○ 정상거래비율 50% ○ 한계보유비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추가 완화 ○ 정상거래비율 50% ○ 한계보유비율 10%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살리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완의원안 <input type="checkbox"/>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살리기
가업상속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2천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3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 유지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및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70% ○ (한도)가업기간별 차등 <p>10년이상 : 100억원, 15년이상 : 150억원, 20년이상 : 300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현행유지 ○ 조정식의원안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100%로 확대 ▪ (한도)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 10년이상: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살리기
	<input type="checkbox"/> 가업영위 및 대표자 재직요건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 <input type="checkbox"/> 현행유지 ○ 조정식의원안 <input type="checkbox"/>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속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은 물론 그 상속인의 배우자도 인정 ▪ 사후관리 기간(10년간) 불이행시 추징 ▪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원가를 피상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살리기

항목	현행	개정안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결과	성과
			속인의 취득 원가로 계산	

□ 광주은행·경남은행 향토 은행화

- 우리은행 분리매각을 위해 지주회사 분할 및 지방은행 합병시 발생하는 법인세를 면세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향토은행화를 위해 2월 국회로 연기해서 논의하기로 했음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 산입

- 뉴타운 정비사업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채권을 포기하거나 ②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에 대해 시공사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여 뉴타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채권·채무자에게 출구를 마련하였음

2014. 1. 2.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장병완)

민주당 조세정의실천특별위원회 위원 :

장병완(위원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현미(간사, 민주당 정책위 제2정조위원장),

문병호(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재위) 설훈, 윤호중, 이용섭, 정성호, 조정식, 최재성, 홍종학,

(예결위) 최재천, (안행위) 백재현, 유대운,

(직능) 유성엽, (공보) 이연주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민주당 주요 대응 경과 내용

- 정부는 지난 8월 8일,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지우는 이른 바 ‘월급쟁이 지갑털기’ ‘영세자영업자·농민 쥐어짜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 민주당은 즉각 8월 12일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장병완 정책위 의장)」(이하 조세정의실천 특별위원회, 11월 2일 명칭 변경)를 구성해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 월급쟁이·자영업자·농민등 중산·서민층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주는 무책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힘
- 이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점재검토”를 지시하여, 경제부총리가 8월 13일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연 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발표
-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미봉책에 대해 ‘대통령지시 하루 만에 줄속대책을 발표’한 정부의 수정안을 비판하고 “이명박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를 철회”할 것을 촉구
- 민주당은 8월 22일 「2013년 세제개편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제1차)를 개최하고, 8월 27일 「2013년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①의제매입세액공제 간담회(제2차)」를 개최하여 (사)한국의식업중앙회 및 전국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9월 3일 「2013년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②중소기업인 간담회(제3차)」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
- 민주당은 11월 14일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발표.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추가로 선정,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와 동행하는 민주당」을 실천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힘
- 이에 따라 민주당의 세제정책 목표는 기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서민복지재원마련에서 중소·중견기업, 영세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를 추가한 쌍두마차체제로 진행함

- 12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법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12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힘내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제4차)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건의사항을 수렴

- 민주당은 12월 1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하여 「힘내라! 외식자영업!」 간담회(제5차)를 개최하여 ‘영세자영업자 지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건의사항을 수렴

- 앞으로도 민주당은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민·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 가중을 철저히 차단하고,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슈퍼부자 감세기조 저지를 위해 「조세정의실천 특별위원회(위원장 : 장병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

< 민생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예산 확보 내역 >

1.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 확대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정부안)→15%p로 5%p 추가인상: +3,472억원 증액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 3%p(정부안)→6%p로 3%p 추가인상

2. 초중학교 급식 실시 지자체 및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초등 방과후 돌봄 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동 사업의 소요재원 초중학교 급식실시 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에 사용
- 지원수준은 '13년 수준(2010억원) 수준 유지

3. 학교비정규직(14만명) 장기근무가산금 월2만원 인상

4. 점통·냉골 교실 해소를 위한 학교 전기요금 지원: +1,110억원

5. ① 8년제 동결된 쌀 목표가격 인상(17→18.8만원), ② 쌀고정직불금 10만원(80→90만원) 인상, ③ 농업정책금리 인하(2%→1%), ④이모작 발작물 고정직불금 인상(20→40만원) 등 농민지원: 연간 +1,500억원+@

6. 0~2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12만원→15만원) 및 민간어린이집 원장 담임수당 월 7만 5천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10억) 등 보육지원 확대: +419억원

7. 전국 62,000여 경로당에 월 30만원(5개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6억원), 어르신 일자리 1.5만명 확대(29.5→31만) 등 효도 예산:+641억원

8.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월2만원 인상(전년대비) 등 애국복지: +328억원

9. 사병급식비 6.5% 인상(+333억원), 보충역 피복예산(+81억원), 50년된 수통 교체(+13억원), 병영문화쉼터(+250억원) 등 사병복지 증진

10. 민주 시민단체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시킨 족쇄였던 '예산 집행 지침' 수정 및 폐지(부대의견), 부마항쟁명예회복지원(+8억), 위안부피해자 기록화 사업(+10억원) 등 민주인권 예산 확보

11.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확대(+4,645억원), 주택바우처시범사업(+60억원),재정비축진사

업지원(+15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100억원) 등 주거복지 확대

12.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5억원), 시니어 창업지원(+2억원), 창업인프라지원(+45억원), 소상공인 조직화 기반구축(+7억원) 등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13. 민주당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93억('14년 정부안+93억원)
-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20억원('14년정부안 624억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 +48억원('14년정부안 374억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3억원('14년정부안 237억원)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586억원('14년 정부안 1,230억원)
- 여성장애인 출산, 교육비용 지원: +10억원('14년정부안 5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50억원(신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 +19억원('14년정부안 391억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억원('14년정부안 133억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원('14년정부안 64억원)
-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3억원('14년 200억원)
- 도시재생사업: +63억원('14년정부안 243억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75억원('14년 정부안 596억)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0억원('14년 정부안 30억)자금 확대: +153억원('14년 정부안 666억원)
-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발급대상 10만명 확대(140→150만명):+35억원('14년 정부안 421억원)
- 초등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11억원('14년 정부안 119억원) 등

14.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 2014인천아시안게임: + 416억원('14년 821억원)
- 2014인천장애인경기: + 60억원('14년정부안 108억원)
- 2015광주U대회:+105억원('14년 정부안 714억원)

 증액성과

1.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 확대

- ①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p(정부안)→15%p로 5%p 추가인상: +3,472억원 증액
 - 보육료 지원: +252,776백만원('14년 1,120,857)
 - 가정양육수당: +94,462백만원('14년 1,120,857)

- ②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14년부터 지방소비세율 3%p(정부안) → 6%p로 3%p 추가인상

2. 초중학교 급식 실시 지자체 및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2,000억원 수준

-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초등 방과후 돌봄 사업'을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동 사업의 소요재원 초중학교 급식지원에 사용
- 지원 수준을 2013년도 수준(2,010억원)으로 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재정지원이 지자체에 갈 수 있도록 함

※ 부대의견: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4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의회는 위 부담완화 규모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법정전출금 제외)의 규모를 적절하게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한다.

3. 학교비정규직(14만명) 장기근무가산금 월2만원 인상

- 14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월 2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 ※ 부대의견: 교육부는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1인당 2만원(기합의된 월 1만원 포함)씩 증액 지원한다.

4. 빙글·냉글 교실 해소를 위한 학교 전기요금 지원: +1,110억원

※ 부대의견: 정부는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현행보다 4% 인하(약 300억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약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한다.

- 5. ① 8년제 동결된 쌀 목표가격 인상(17→18.8만원), ② 쌀고정직불금 10만원(80→90만원) 인상, ③ 농업정책금리 인하(2%→1%), ④이모작 밭작물 고정직불금 인상(20→40만원) 등 농민지원: 연간 +1,500억원+ @

- 쌀목표가격 인상액을 80kg 1가마 기준 188,000원으로 인상
- 2014년 쌀고정직불금을 ha당 80→90만원으로 인상: +860억원
- 동계작물 재배 시, ha당 40만원 추가(예산안 ha당 20만원):+453억원
- 농규모화사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 2%를 1%로 인하(이차보전): +180억원

6.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 처우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지원 확대

- 0~2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12만원→15만원)
- 민간어린이집 원장담임수당 월 7만 5천원 지급(예비비로 지급)
-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14년243억원)

7. 효도예산 - 어르신 지원 확대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86억원(신규, 안행부 특교 292억 포함)
 - 전국 63,000여개 경로당에 5개월 월 30만원 지원
- 노인일자리 확대: 55억원('14년 300억원)
-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타당성 조사: +1억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660백만원(+6,587백만원)

8. 애국복지: +328억원

-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인상(전년대비): +300억원('14년 4,822억원)
 - * '13년 월15만→'14정부안 월16만→국회 17만
- 무공영예 수당 월 2만원 인상(전년대비): +27억원('14년 614억원)
 - * '13년 월21~23만→'14정부안 월22~24→국회 월 23~25만원

9. 사병 복지 증진

- 사병급식비 6.5% 인상: +333억원
- 보충역 피복예산(+81억원), 기능성 방한복(+1,9억원)
- 50년된 수통교체(+13억원)
- 지털 TV 보급: +22억원('14년 23억원)
- 병영문화쉼터: +250억원('14년 140억원)
- 병영생활관 개보수: +138억원('14년 1,334억원)

10. 민주 인권 예산

- 제주 4·3 평화재단 지원: +20억원('14년 50억원)

- 부마항쟁명예회복지원: +8억원('14년 30억)
-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지원:+1억원('14년 73억원)
- 위안부피해자 기록화 사업:=10억원('14년 2억원)

□ 민주 시민단체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시킨 족쇄였던 '예산 집행 지침' 수정 및 폐지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의 보조금 지원제한 항목의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문구를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로 변경하고,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성원이 처벌받은 단체” 문구를 삭제한다.

11. 주거복지 확대

-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확대:+4,645억원('14년 3,390억원)
* 타당성 없는 행복주택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임대주택 예산 증액
- 주택바우처시범사업: +60억원('14년 236억원)
- 재정비축진사업지원: +150억원('14년 1,100억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100억원('14년 400억원)
- 도시재생사업: +63억원('14년 243억원) 등

12.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5억원('14년 58억원)
- 시니어 창업지원: +2억원('14년 45억원)
- 창업인프라 지원: + 45억원('14년 202억원)
- 소상공인 조직화·공동화 기반구축: +7억원('14년 103억원)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8억원('14년 161억원)
- 소상공인 행동조합 활성화: +10억원('14년 261억원)

13. 민주당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93억('14년 정부안+93억원)
-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20억원('14년정부안 624억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 +48억원('14년정부안 374억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23억원('14년정부안 237억원)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586억원('14년 정부안 1,230억원)
- 여성장애인 출산, 교육비용 지원: +10억('14년정부안 5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50억(신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새일센터): +19억원('14년정부안 391억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억원('14년정부안 133억원)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14년정부안 64억원)
-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3억원('14년 200억원)
- 도시재생사업: +63억원('14년정부안 243억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75억('14년 정부안 596억)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0억('14년 정부안 30억)자금 확대 +153억원('14년 정부안 666억원)
-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발급대상 10만명확대(140→150만명):+35억원 ('14년 정부안 421억원)
- 초등학교스포츠클ubs사 처우개선: +11억원('14년 정부안 119억원)
-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3억원('14년 정부안 108억원) 등

14.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 2014인천아시안게임: + 416억원('14년 821억원)
- 2014인천장애인경기: + 60억원('14년정부안 108억원)
- 2015광주U대회:+105억원('14년 정부안 714억원)



삭감 성과

1. 여왕된 유명무실 박근혜표 사업 삭감

-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
 - 새마을 빙자 최경환의원 지역구 사업인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연계사업” △ 18억원
 -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중 전시성인 “새마을운동지도자세계대회” 행사 예산 △5억원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100억원
- 제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3대 대통령자문위원회
 - 국민대통합위원회 : △155백만원

- 청년위원회 : △450백만원
- 문화융성위원회 : △220백만원

2. 불법 대선개입, 정치적 중립 망각 국가기관 경고 및 관련사업의 삭감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의 정치적 중립 망각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나라사랑교육을 담당하는 보훈선양국의 기본경비 10%인 △15백만원을 “징벌성” 삭감
 - 대선개입의 직접 관련 사업인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에서 정부안(3,7억원) 대비 △32.3%인 △12억원 삭감
 - 독재 미화 의혹이 있는 “이승만박사 전집” 발간사업 1억원 삭감
- 국군사이버사령부
 - 인건비 : △15억, 사업비 : △5억, 시설비 및 장비구축비: △9억원
- 통일부
 - 사회통일교육내실화 : △4억원, 통일정책수립인프라구축사업 : △1억원
 - 통일정책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2억원 등

3. 정권 홍보 방지를 홍보예산 대폭 삭감

- 국민기만, 원자력 홍보 예산 △10억원 최초 삭감
- 정권 정책 홍보 예산:△40억원 일괄 삭감

4. 기타

- 경찰청 채증용 고성능카메라 구입 예산 △290백만원은 철도과업관련 경찰의 불법적인 경향신문과 민주노총 난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전액 삭감
- 역사적 편향성으로 문제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대사연구 활성화 사업에서 △450백만원
- 원전관련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 :△4억원
- F-X 사업 : △3,664억원
- 제주해군기지 사업 : △500억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014. 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 2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4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6까지	목	각급선거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 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5부터 5. 16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16부터 5. 20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5. 21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까지	금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⑤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5. 26까지	월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규§77
5. 26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5. 28까지	수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금 토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8의3④
6. 4	수	투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	법 제10장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6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 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 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 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MEMO



MEMO



MEMO



MEMO



